

의안 번호	1916	<b>【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종과세율 감면 동의안】</b>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8.(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3. 8.(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3. 21.(월)

## 2. 제안설명 요지(일자리경제 국장 노선숙)

###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재산세 과세기준일(22. 6. 1.) 현재)
  -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종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 감면율
  -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2)의 일반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 토 지: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법」 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지방세법시행령

###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 3.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